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94
----------	-----

제출연월일 : 2008.10.27.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개정이유

조직개편 및 위임사무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및 소관부서를 정비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및 위임사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관부서와 인용법령 등을 정비함(안 별표 1·2·3).

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서 및 자치구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8. 9. 5. ~ 9. 25. / 접수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소관부서란중 “인력개발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중 “인력개발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별표 2 지적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중 “공원산림과”를 “푸른도시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푸른도시과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보문산, 세천, 가양, 계족산공원에 한한다. 다만, 계족산공원중 장동 산림욕장 구역은 제외한다) 가. 녹지활용계약 나. 녹화계약 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위탁 및 공고 마.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 조치 바. 점용공작물의 관리 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아. 원상 회복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허가 차. 매수대상토지의 매수 및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 카. 도시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 타. 입장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5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9조·제30조·제32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40조·제41조	공원관리 사업소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과. 점용료의 강제징수 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너.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 구역 관리대장 작성·보관 더.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5조·제47조 · 같은 법 제46조 · 같은 법 제51조 · 같은 법 제56조		

별표 2 푸른도시과(중전 공원산림과) 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라목부터 카목까지를 다목부터 차목까지로 한다.

별표 2 푸른도시사업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중 “운송주차관리과”를 “운송주차과”로 하고, 근거법령란중 “같은 법 제13조(동조 제8항·제9항 제외)”를 “같은 법 제13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7호·제9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7호·제8호·제9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로 한다.

별표 2 건설도로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건설도로과	1. 도시계획상 폭 20m 이상의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자치구청장 위임사항은 제외) 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사업소에서 인·허가한 경우에 한함) 나.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다. 도로의 사용 개시 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마.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바. 부대공사의 시행	· 「도로법」 제4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2조	건설관리 본 부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사. 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수선 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 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및 준공검사 자. 도로대장의 작성 보관·관리 차.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 가 및 준공검사(다만, 보도구간은 제외) 카. 도로공사계획의 공고 타. 점용공사의 대행 파. 원상회복의 확인 하.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 거.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너. 도로의 통행금지 및 제한 명령 더. 차량의 운행제한(단속) 및 운 행의 허가(폭 20m 미만의 도로 포함) 러. 도로 등에의 다른 시설의 연 결허가 머.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 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버.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어.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징수 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부담하 는 수선,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조치명령 커. 공익을 위한 처분 터. 도로에 관한 사항 조사 퍼. 수수료의 징수 허.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고. 과오납금의 반환 노.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8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58조 · 같은 법 제59조 · 같은 법 제64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78조 · 같은 법 제83조 · 같은 법 제84조 · 같은 법 제87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제90조 · 같은 법 제91조 · 같은 법 제101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p>2. 폭 20m 이상 교량(차도육교포함) 및 터널에 대한 다음의 사항 (폭 20m 미만 교량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 2종 시설물은 포함, 곤룡터널은 제외)</p> <p>가. 신설, 개축,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p> <p>나. 안전점검실시에 관한 사항</p> <p>다.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p> <p>3. 도로의 부속물중 다음의 권한</p> <p>가. 지하차도 : 구체안전점검실시, 포장관리,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p> <p>나. 가도교 : 포장관리(조인트포함)</p> <p>4. 건설사업의 지장물 및 용지 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p> <p>나. 보상금 지급</p> <p>다. 손실보상금 보상</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37조</p> <p>· 같은 법 제37조</p> <p>· 같은 법 제37조</p> <p>· 같은 법 제37조</p> <p>· 같은 법 제37조</p> <p>·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p> <p>· 같은 법 제40조</p> <p>· 같은 법 제61조</p>		

별표 2 도시계획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2 건설도로과란 다음에 지적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지적과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5조	사업소 및 직속기관장	

별표 3 경제정책과란 제2호·제7호·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제10호·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경제정책과	2.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7.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와 관련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등 나. 허가의 기준 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 라. 사업의 승계 마. 허가의 취소 등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 사. 안전관리규정 승인, 변경명령 아.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등 자. 위해방지 등의 조치 차. 보고·조사 등 카. 청문 타.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8.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립·해산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나.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의 보완요구 및 통보	· 「물기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제3항 · 같은 법 제4조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5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2조·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구청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다. 노동조합의 변경신고서 수리 및 변경신고증 교부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라.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 같은 법 제18조·제28조·제36조·제42조		
	마. 임시총회 소집 등의 소집권자 지명 및 통보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바.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중 지명령 및 통보	· 같은 법 제21조·제4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2조		
	사. 자료제출의 요구	· 같은 법 제27조		
	아.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 명령·통보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자.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 용 결정 및 통보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차. 직장폐쇄 신고수리	· 같은 법 제46조		
	카. 폭력행위 등의 신고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타.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경제정책과란 제5호자목 및 제6호바목중 “수수료”를 각각 “수수료
부과·징수”로 한다.

별표 3 기업지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기업지원과	<p>1. 열제조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열전개발 및 열제조업 허가 및 변경</p> <p>나. 허가의 취소 등</p> <p>다. 청문</p> <p>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관리 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등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p> <p>나. 보고와 검사 등</p> <p>다. 과태료 부과·징수</p> <p>3.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계량증명업에 한함)</p> <p>나.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 및 수입내용 기재서류 접수</p> <p>다. 계량기의 자체수리</p> <p>라. 검사에 관한 사항</p> <p>마. 정기검사의 증인</p> <p>바. 보고 및 검사 등</p> <p>사. 개선명령</p> <p>아.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계량증명업에 한함)</p> <p>자. 청문</p> <p>차. 과태료 부과·징수</p> <p>4.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p> <p>나. 승강기관리주체에 대한 검사</p> <p>다. 과태료 부과·징수</p>	<p>· 「열관리법」 제3조</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24조</p> <p>·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9조</p> <p>· 같은 법 제20조</p> <p>· 같은 법 제28조</p> <p>·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p> <p>·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p> <p>·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p> <p>· 같은 법 제32조</p> <p>· 같은 법 제33조</p> <p>· 같은 법 제34조</p> <p>· 같은 법 제35조</p> <p>· 같은 법 제38조</p> <p>· 같은 법 제41조제2항</p> <p>· 같은 법 제51조</p> <p>·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p> <p>· 같은 법 제21조</p> <p>· 같은 법 제28조</p>	구청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비고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 같은 법 제41조		

별표 3 기업지원과란 다음에 대덕특구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비고
대덕특구과	1. 산업단지내 사유행정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허가 나. 대장 및 증서 보존 다. 재산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같은 법 제44조제1항 · 같은 법 제44조제2항	구청장	

별표 3 농업유통과란 제2호가목 근거법령란중 “「약사법」 제44조 및 제 45조”를 “「약사법」 제45조”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비고
농업유통과	5.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권한 가. 원산지의 표시등의 조사 나. 원산지표시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처분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 같은 법 제18조의2 · 같은 법 제38조	구청장	

별표 3 산업용지팀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소관부서란중 “인력개발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별표 3 지적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3 관광문화재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문화예술과	1. 전통사찰의 경내지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제2항	구청장	
관광문화재과	1. 문화재 수리	· 「문화재보호법」 제17조· 제75조	구청장	

별표 3 보건위생과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삭제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보건위생과	5. 약업사의 영업소 이전허가	· 「약사법 시행규칙」 (제434호) 부칙 제6조	구청장	

별표 3 소관부서중 “수질관리과”를 “맑은물정책과”로 하고, 제1호나목중 “지도 및 명령 등”을 “지도와 개선명령”으로, 제1호다목중 “같은 법 제 46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하고, 맑은물정책과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맑은물정책과	5. 측정기기의 부착확인 등(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 단지내 사업장은 제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제4항	구청장	

별표 3 소관부서중 “공원산림과”를 “푸른도시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신설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푸른도시과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보문산, 세천, 가양, 둔산대공원, 계족산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계족산공원중 장동산림욕장 구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녹지활용계약 나. 녹화계약 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구청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라. 도시공원의 조성계획(변경)입안 및 결정(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 (1) 근린공원 입안 (2) 소공원, 어린이공원 입안·결정·인가 (3) 주제공원(역사,문화,수변,묘지, 체육공원등)입안 마.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바.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 사.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위탁 공고 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자. 겸용공작물의 관리 차.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가. 원상회복 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허가 파. 매수대상토지의 매수 및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 하. 도시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 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너. 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관리 더. 녹지의 점용허가 등 러. 입장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 머. 점용료의 강제 징수	· 같은 법 제1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같은 법 제1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5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9조·제30조·제32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40조·제41조 · 같은 법 제43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서.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어.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대장 작성·보관 저. 과태료의 부과·징수 3. 광장시설 유지관리 (경관광장 등 공원녹지 기능을 하는 광장에 한한다)	· 같은 법 제45조·제47조 · 같은 법 제46조 · 같은 법 제51조 · 같은 법 제5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별표 3 푸른도시사업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자원순환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자원순환과	1.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 2.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종합 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지정 폐기물은 제외함)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나. 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 다.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라. 과징금 부과·징수 마.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바.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항 사. 폐기물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0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39조	구청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자원순환과	아.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 자. 법령 또는 명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 및 청문에 관한 사항 3. 과태료 부과·징수 4. 폐기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허가권의 취소 등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승인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라. 과징금의 처분 등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개선, 사용중지, 폐쇄 명령 등) 아.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자. 권리·의무의 승계 등 차. 휴업·폐업 등의 신고 및 보고·검사 등 카.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타. 방치폐기물의 처리 파.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및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하. 청문	· 같은 법 제40조제2항 · 같은 법 제60조·제61조 · 같은 법 제6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제2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제23조제3항 · 같은 법 제26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제30조제3항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3조·제34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5조·제46조 · 같은 법 제57조	구청장	

별표 3 생태하천사업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생태하천 사 업 단	1.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나.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다.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마. 하천의 점용허가 등 바.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사.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아.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자. 하천의 사용금지 등 차. 원상회복 의무 카. 낚시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타. 부담금등의 강제 징수 파. 잘못 납부된 부담금등의 반환 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너. 하천관리원 임명 등 더.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러.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 「하천법」 제5조제2항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47조 ・ 같은 법 제4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같은 법 제67조 ・ 같은 법 제68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2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74조	구청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머.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 에의 출입 등 버.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 서.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어. 토지 등의 수용·사용 저. 하천표지의 설치·관리 처. 폐천부지등의 관리 커.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터. 허가수수료 징수·감면 퍼.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 및 출입등 허. 청문 고. 과태료 부과·징수 2. 국가하천의 관리에 관한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3.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에 관 한 다음의 권한 가. 보상대상자의 결정 나. 보상계획의 수립 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라. 보상금액의 산정 마. 보상금 지급의 통지 바.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78조 · 같은 법 제83조 · 같은 법 제84조 · 같은 법 제85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제90조 · 같은 법 제91조 · 같은 법 제98조 · 「하천법」 제37조 ·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3 소관부서란중 “운송주차관리과”를 “운송주차과”로 하고, 제1호·제2호·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운송주차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신청기간의 연장 나. 공사완료 시설 확인 다. 사용개시일 연장 라. 사용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마. 시설 사용료의 인가 및 변경 인가 바.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 및 시정명령 사.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아. 위치·규모·구조·설비의 변경인가 자. 개선명령 차. 사용명령 카. 사업의 상속 및 양도, 양수, 법인합병 신고의 수리 타. 사업의 휴지·폐지허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등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및 유상임대 허가 7.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수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 · 같은 법 제38조제4항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항 · 같은 법 제42조제3항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8조 · 같은 법 제48조 · 같은 법 제79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구청장	

별표 3 건설도로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건설도로과	<p>1. 도시계획상 폭 20m 미만의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의 접수</p> <p>나.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p> <p>다.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p> <p>라. 도로구역의 결정, 변경 및 고시</p> <p>마.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p> <p>바.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p> <p>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p> <p>아.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p> <p>자. 부대공사의 시행</p> <p>차. 공공단체등에 대한 도로 수선 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p> <p>카.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허가</p> <p>타. 도로대장의 작성보관·관리</p> <p>파. 도로점용허가</p> <p>하. 점용공사의 대행</p> <p>거. 점용료 부과·징수</p> <p>너. 원상회복의 확인</p> <p>더. 비상재해시 필요 토지·가옥·공작물의 일시사용 및 토석·죽목, 기타 물건의 사용 또는 수용</p> <p>러.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p> <p>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p> <p>버. 도로의 통행금지 및 제한 명령</p> <p>서. 차량의 운행제한(단속)</p> <p>어.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도로 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p>	<p>· 「도로법」 제4조</p> <p>· 같은 법 제22조</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24조</p> <p>· 같은 법 제27조</p> <p>· 같은 법 제29조</p> <p>· 같은 법 제30조</p> <p>· 같은 법 제31조</p> <p>· 같은 법 제32조</p> <p>· 같은 법 제33조</p> <p>· 같은 법 제34조</p> <p>· 같은 법 제36조</p> <p>· 같은 법 제38조</p> <p>· 같은 법 제40조</p> <p>· 같은 법 제41조</p> <p>· 같은 법 제43조</p> <p>· 같은 법 제47조</p> <p>· 같은 법 제48조</p> <p>· 같은 법 제57조</p> <p>· 같은 법 제58조</p> <p>· 같은 법 제59조</p> <p>· 같은 법 제74조</p>	구청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저.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커. 부대공사비용의 부과·징수 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부담하 는 수선·유지비용의 부과·징수 퍼.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조치명령 허. 공익을 위한 처분 고. 청문 실시 노. 도로에 관한 사항 조사 등 도. 수수료의 징수 로.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모. 과오납금의 반환 보.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소. 변상금의 부과·징수 오. 과태료의 부과·징수 2. 도시계획상 폭 20m 이상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도의 개축, 수선 등 유지관 리 및 굴착 허가(자전거도로 포함) 나. 도로점용허가(다만, 굴착을 수 반하는 점용허가는 제외) 다. 점용료의 부과·징수 라. 차량의 운행제한(단속) 마. 적치물의 제거, 보관, 관리 등 바. 변상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78조 · 같은 법 제83조 · 같은 법 제84조 · 같은 법 제85조 · 같은 법 제87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제90조 · 같은 법 제91조 · 같은 법 제93조 · 같은 법 제94조 · 같은 법 제101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59조 · 같은 법 제65조 · 같은 법 제94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p>3. 폭 20m 미만 교량(차도육교 포함) 및 터널에 대한 다음 사항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은 제외)</p> <p>가. 신설, 개축,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p> <p>나. 안전점검실시에 관한 사항</p> <p>다.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4. 도로의 부속물중 다음의 권한</p> <p>가. 가로등의 신설, 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나. 지하차도 배수·조명·전기·지하재방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타일세척포함)</p> <p>다. 지하보도 개축, 수선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라. 가도교의 배수·조명·전기·안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마. 터널의 배수·조명·전기·지하재방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바. 지하상가 출입구 및 지하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제외)</p> <p>사. 보도육교 개축, 수선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5. 폭 20m 미만 도로의 도로편입용 지보상(매수 및 소유권이전)</p> <p>6. 기부재산(지하상가) 무상사용 허가</p> <p>7. 공유재산의 대장 및 실태조사 (도로인 경우에 한함)</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37조</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48조 및 제92조</p> <p>· 「도로법」 제38조</p> <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p>		

별표 3 소관부서란중 “도시관리과”를 “주택정책과”로 하고, 제5호가목·나목·자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포함,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 「도시개발법」 제3조·제79조		
	나.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같은 법 제4조·제79조		
	자.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승인	· 같은 법 제23조		
	차.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등의 대금(선수금) 사전 징수 승인	· 같은 법 제25조		
	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 같은 법 제26조		
	타.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보완 시공 명령	· 같은 법 제50조·제51조		
	파.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 같은 법 제53조		
	하. 구청장이 시행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비용부담 협의	· 같은 법 제56조		
	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권한	· 같은 법 제58조		
	너.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등	· 같은 법 제66조		
	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같은 법 제68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p>8.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국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가하는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p> <p>나. 500세대 미만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 지정(전기감리 포함), 감리업무 지정 제한</p> <p>다. 5만㎡ 미만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p> <p>9.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착공신고의 접수·승인취소</p> <p>10. 감리자교체 및 보고업무</p> <p>11. 보고·검사 등</p> <p>12.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p>	<p>· 「주택법」 제16조</p> <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항</p> <p>· 「주택법」 제24조</p> <p>·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p> <p>· 「주택법」 제16조</p> <p>· 같은 법 제16조</p> <p>· 같은 법 제24조</p> <p>· 같은 법 제90조</p> <p>· 같은 법 제93조</p>		

별표 3 건축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주택정책과란 다음에 도시디자인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도시디자인과	<p>1. 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p> <p>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p> <p>나. 2이상의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p>	<p>·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의2제1호</p> <p>· 같은 법 제3조의2제2호</p>	구청장	

별표 3 도시디자인과란 다음에 지적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지적과	1. 시유잡종재산(폐천부지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 나. 대장과 증서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항	구청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기업지원과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3 기업지원과란 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혁신경영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경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경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⑥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경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⑦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경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⑧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관리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⑨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인력개발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⑩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중 “시민봉사실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⑪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회계계약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한다.

⑫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회계계약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한다.

⑬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⑭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⑮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수질관리과장”을 “맑은물정책과장”으로 한다.

⑯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공원산림과장”을 “푸른도시과장”으로 한다.

⑰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공원산림과장”을 “푸른도시과장”으로 한다.

⑱대전광역시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철도기획단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지하철관계공무원”을 “도시철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⑲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⑳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항중 “도시균형개발과장”을 각각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㉑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도시균형개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㉒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㉓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투자유치팀장”을 “투자마케팅과장”으로 한다.

㉔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건설관리본부장, 도시철도기획단”을 “건설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인력개발과	1~2 (생략)		운영지원과	1~2 (현행과 같음)	
[별표 2]			[별표 2]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인력개발과	1~6 (생략)		운영지원과	1~6 (현행과 같음)	
지적과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허가 취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5조		〈삭제〉	
공원산림과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보문산 세천 기양 계곡산공 원에 한한다. 다만, 계곡산공원 중 장동산림욕장 구역은 제외 한다) 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 리위탁 및 공고 다.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 및 공고 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마. 검용공작물의 관리 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사. 원상회복 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허가 자. 매수대상토지의 매수 및 협약에 의한 토지매수 차. 도시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 카.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점용 료의 부과·징수 타. 점용료의 강제징수 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 한 처분 및 청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5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제32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5조· 제47조	푸른도시과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보문산 세천 기양 계곡산공 원에 한한다. 다만, 계곡산공원 중 장동산림욕장 구역은 제외 한다) 가. 녹지활용계약 나. 녹화계약 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 리위탁 및 공고 마.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바. 검용공작물의 관리 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아. 원상 회복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허가 차. 매수대상토지의 매수 및 협약에 의한 토지매수 카. 도시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 타. 입장료등의 징수 및 점용 료의 부과·징수 파. 점용료의 강제징수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 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5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제 32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 같은 법 제43조

현			개			정			안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하.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같은 법 제46조		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 한 처분 및 청문	·같은 법 제45조·제47조		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 한 처분 및 청문	·같은 법 제45조·제47조		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 한 처분 및 청문	·같은 법 제45조·제47조
	거.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 연공원구역 관리대장 작 성·보관	·같은 법 제51조		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같은 법 제46조		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같은 법 제46조		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같은 법 제46조
	너.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6조		너.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 공원 구역 관리대장 작성·보관	·같은 법 제51조		너.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 공원 구역 관리대장 작성·보관	·같은 법 제51조		너.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 공원 구역 관리대장 작성·보관	·같은 법 제51조
	2 (생략)			더.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56조		더.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56조		더.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56조
	가.~나. (생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다.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인가·관리위탁 및 공고	·같은 법 제21조		가.~나.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라.~카. (생략)			〈삭제〉			〈삭제〉			〈삭제〉	
				다.~차. (현행과 같음)			다.~차. (현행과 같음)			다.~차. (현행과 같음)	
푸른도시 사업 단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다음의 권한 (보문산 재첩 기양 계족산 공원에 한한다. 다만 계족 산공원중 장동산림욕장 구 역은 제외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삭제〉			〈삭제〉			〈삭제〉	
	가. 녹지활용계약	·같은 법 제13조									
	나. 녹화계약	·같은 법 제13조									
운송주차 관 리 과	2 (생략)		운송주차과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라. (생략)			가.~라. (현행과 같음)			가.~라. (현행과 같음)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생략)	·같은 법 제13조 (동조 제8항· 제9항 제외)		마.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자.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7 호·제9호		바.~자. (현행과 같음)			바.~자. (현행과 같음)			바.~자. (현행과 같음)	
	4 (생략)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 조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건설도로과	1. 도시계획상 폭 20m 이상의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자치구청장 위임사 항은 제외)		건설도로과	1. 도시계획상 폭 20m 이상의 도 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자치구청장 위임사항은 제외)			1. 도시계획상 폭 20m 이상의 도 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자치구청장 위임사항은 제외)			1. 도시계획상 폭 20m 이상의 도 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자치구청장 위임사항은 제외)	
	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사업소에서 인·허가한 경우에 한함)	· 「도로법」 제6조		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접 수 (사업소에서 인·허가한 경 우에 한함)	· 「도로법」 제4조		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접 수 (사업소에서 인·허가한 경 우에 한함)	· 「도로법」 제4조		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접 수 (사업소에서 인·허가한 경 우에 한함)	· 「도로법」 제4조
	나.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같은 법 제24조		나.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 선에 관한 공사	·같은 법 제23조		나.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 선에 관한 공사	·같은 법 제23조		나.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 선에 관한 공사	·같은 법 제23조
	다. 도로의 사용 개시	·같은 법 제28조		다. 도로의 사용 개시	·같은 법 제27조		다. 도로의 사용 개시	·같은 법 제27조		다. 도로의 사용 개시	·같은 법 제27조
	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같은 법 제30조		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같은 법 제30조		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같은 법 제30조		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같은 법 제30조
	마.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같은 법 제31조		마.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 행 명령	·같은 법 제31조		마.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 행 명령	·같은 법 제31조		마.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 행 명령	·같은 법 제31조
	바. 부대공사의 시행	·같은 법 제32조		바. 부대공사의 시행	·같은 법 제32조		바. 부대공사의 시행	·같은 법 제32조		바. 부대공사의 시행	·같은 법 제32조
	사. 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 수선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	·같은 법 제33조		사. 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수 선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	·같은 법 제33조		사. 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수 선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	·같은 법 제33조		사. 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수 선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	·같은 법 제33조

현행			개정안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아.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및 준공검사	· 같은 법 제34조		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및 준공검사	· 같은 법 제34조
	자. 도로대장의 작성 보관·관리	· 같은 법 제38조		자. 도로대장의 작성 보관·관리	· 같은 법 제36조
	차.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및 준공검사(다만 보도구간은 제외)	· 같은 법 제40조		차.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및 준공검사(다만 보도구간은 제외)	· 같은 법 제38조
	카. 도로공사계획의 공고	· 같은 법 제40조		카. 도로공사계획의 공고	· 같은 법 제38조
	타. 점용공사의 대행	· 같은 법 제42조		타. 점용공사의 대행	· 같은 법 제40조
	파. 원상회복의 확인	· 같은 법 제45조		파. 원상회복의 확인	· 같은 법 제43조
	하.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사용 또는 수용 등	· 같은 법 제49조의2		하.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	· 같은 법 제48조
	거.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 같은 법 제52조		거.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 같은 법 제57조
	너. 도로의 통행금지 및 제한 명령	· 같은 법 제53조		너. 도로의 통행금지 및 제한 명령	· 같은 법 제58조
	더. 차량의 운행제한(단속) 및 운행의 허가(폭 20m 미만의 도로 포함)	· 같은 법 제54조		더. 차량의 운행제한(단속) 및 운행의 허가(폭 20m 미만의 도로 포함)	· 같은 법 제59조
	러. 도로등에의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 같은 법 제54조의6		러. 도로 등에의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 같은 법 제64조
	머.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2조		머.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4조
	버.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3조		버.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5조
	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4조		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6조
	어.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5조		어.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7조
	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부담하는 수선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9조		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부담하는 수선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8조
	처.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및 조치 명령	· 같은 법 제74조		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조치명령	· 같은 법 제83조
	커.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75조		커.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84조
	터. 도로에 관한 사항 조사	· 같은 법 제76조의2		터. 도로에 관한 사항 조사	· 같은 법 제87조
	퍼. 수수료의 징수	· 같은 법 제77조의2		퍼. 수수료의 징수	· 같은 법 제89조
	허. 부담금등의 강제 징수	· 같은 법 제78조		허.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 같은 법 제90조
	고. 과오납금의 반환	· 같은 법 제78조의2		고. 과오납금의 반환	· 같은 법 제91조
	노.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6조의2		노.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01조

현			개 정 안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p>2. 폭 20m 이상 교량(차도·육교포함) 및 터널에 대한 다음의 사항(폭 20m 미만 교량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 2층 시설물은 포함, 콘크리트널은 제외)</p> <p>가. 신설, 개축,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p> <p>나. 안전점검실시에 관한 사항</p> <p>다.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p> <p>3. 도로의 부속물중 다음의 권한</p> <p>가. 지하차도 : 구체안전점검 실시, 포장관리,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p> <p>나. 가도교 : 포장관리(조인트 포함)</p>	<p>· 같은 법 제3조·제24조</p> <p>· 같은 법 제39조</p> <p>· 같은 법 제39조</p> <p>· 같은 법 제39조</p> <p>· 같은 법 제39조</p> <p>· 같은 법 제39조</p>		<p>2. 폭 20m 이상 교량(차도·육교포함) 및 터널에 대한 다음의 사항(폭 20m 미만 교량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 2층 시설물은 포함, 콘크리트널은 제외)</p> <p>가. 신설, 개축,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p> <p>나. 안전점검실시에 관한 사항</p> <p>다.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p> <p>3. 도로의 부속물중 다음의 권한</p> <p>가. 지하차도 : 구체안전점검 실시, 포장관리,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p> <p>나. 가도교 : 포장관리(조인트 포함)</p> <p>4. 건설사업의 지장물 및 용지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p> <p>나. 보상금 지급</p> <p>다. 손실보상금 보상</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37조</p> <p>· 같은 법 제37조</p> <p>· 같은 법 제37조</p> <p>· 같은 법 제37조</p> <p>·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p> <p>· 같은 법 제40조</p> <p>· 같은 법 제61조</p>
도시계획과	<p>1. 건설사업의 지장물 및 용지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p> <p>나. 보상금 지급</p> <p>다. 손실보상금 보상</p>	<p>·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p> <p>· 같은 법 제40조</p> <p>· 같은 법 제61조</p>	도시계획과	〈삭제〉	
	〈신설〉		지적과	<p>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허가 취소</p>	<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5조</p>

[별표 3]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경제정책과	<p>2.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p> <p>5. (생략)</p> <p>자. 수수료</p> <p>6. (생략)</p> <p>바. 수수료</p> <p>7.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와 관련 다음의 권한</p> <p>가. 사업의 허가 등</p> <p>나. 허가의 기준</p> <p>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p>	<p>·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29조</p> <p>· 같은 법 제41조</p> <p>· 같은 법 제41조</p> <p>·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제3항</p> <p>·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p> <p>· 같은 법 제6조</p>

[별표 3]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경제정책과	<p>2.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p> <p>5. (현행과 같음)</p> <p>자. 수수료 부과·징수</p> <p>6. (현행과 같음)</p> <p>바. 수수료 부과·징수</p> <p>7.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와 관련 다음의 권한</p> <p>가. 사업의 허가 등</p> <p>나. 허가의 기준</p> <p>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p>	<p>·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p> <p>· 같은 법 제41조</p> <p>· 같은 법 제41조</p> <p>·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제3항</p> <p>· 같은 법 제4조</p> <p>· 같은 법 제7조</p>

현			개 정 안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라. 사업의 승계	· 같은 법 제7조제3항		라. 사업의 승계	· 같은 법 제8조
	마. 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8조제1항		마. 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9조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0조
	사. 안전관리규정 승인 변경명령	·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4항		사. 안전관리규정 승인 변경명령	· 같은 법 제12조
	아.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등	·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5항·제6항		아.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등	· 같은 법 제16조
	자. 위해방지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32조제2항		자. 위해방지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29조
	차. 보고·조사 등	· 같은 법 제35조제1항		차. 보고·조사 등	· 같은 법 제38조
	카. 청 문	· 같은 법 제36조의2		카. 청문	· 같은 법 제40조
	타.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8조제4항		타.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2조
	8.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8.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개선·폐기·수거명령 등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가. 설립·해산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2조·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11조		나.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의 보완요구 및 통보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8조		다. 노동조합의 변경신고서 수리 및 변경신고증 교부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라.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 같은 법 제18조·제28조·제36조·제42조
				마. 임시총회 소집 등의 소집권자 지명 및 통보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바.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중지명령 및 통보	· 같은 법 제21조·제4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2조
				사. 자료제출의 요구	· 같은 법 제27조
				아.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통보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자.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 및 통보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차. 직장폐쇄 신고수리	· 같은 법 제46조
				카. 폭력행위 등의 신고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타.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현행			개정안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p><u>9.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u></p> <p>가.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계량증명업에 한함)</p> <p>나.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 량기 등의 제작 및 수입내용 기재 서류 접수</p> <p>다. 계량기의 자체수리</p> <p>라. 검사에 관한 사항</p> <p>마. 정기검사의 증인</p> <p>바. 보고 및 검사 등</p> <p>사. 개선명령</p> <p>아.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계량증명업에 한함)</p> <p>자. 청문</p> <p>차. 과태료 부과·징수</p>	<p>· 「계량에 관한 법률」 제6 조제1항</p> <p>·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 2항</p> <p>·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p> <p>· 같은 법 제32조</p> <p>· 같은 법 제33조</p> <p>· 같은 법 제34조</p> <p>· 같은 법 제35조</p> <p>· 같은 법 제38조</p> <p>· 같은 법 제41조제2항</p> <p>· 같은 법 제51조</p>		<p>〈삭제〉</p>	
	<p><u>10.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다 음의 권한</u></p> <p>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p> <p>나.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p> <p>다. 승강기관리주체에 대한 검사</p> <p>라. 과태료 부과·징수</p>	<p>·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p> <p>· 같은 법 제18조제2항</p> <p>·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4 호</p> <p>· 같은 법 제28조</p>		<p>〈삭제〉</p>	
	<p><u>1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에 관한 다음의 권한</u></p> <p>가.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 선·과기·수거명령 등</p> <p>나. 과태료의 부과·징수</p>	<p>·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 전관리법」 제31조</p> <p>· 같은 법 제41조</p>		<p>〈삭제〉</p>	

현행			개정안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기업지원과	1. <u>염제조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u>		기업지원과	1. <u>염제조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u>	
	가. <u>염전개발 및 염제조업 허가 및 변경</u>	· 「염관리법」 제3조		가. <u>염전개발 및 염제조업 허가 및 변경</u>	· 「염관리법」 제3조
	나. <u>허가의 취소 등</u>	· 같은 법 제23조		나. <u>허가의 취소 등</u>	· 같은 법 제23조
	다. <u>청문</u>	· 같은 법 제24조		다. <u>청문</u>	· 같은 법 제24조
				2. <u>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u>	
				가. <u>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개선·과기·수거명령 등</u>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9조
				나. <u>보고와 검사 등</u>	· 같은 법 제20조
				다. <u>과태료 부과·징수</u>	· 같은 법 제28조
				3. <u>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u>	
				가. <u>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계량증명업에 한함)</u>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나. <u>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 및 수입내용 기재 서류 접수</u>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다. <u>계량기의 자체수리</u>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라. <u>검사에 관한 사항</u>	· 같은 법 제32조
				마. <u>정기검사의 증인</u>	· 같은 법 제33조
				바. <u>보고 및 검사 등</u>	· 같은 법 제34조
				사. <u>개선명령</u>	· 같은 법 제35조
				아. <u>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계량증명업에 한함)</u>	· 같은 법 제38조
				자. <u>청문</u>	· 같은 법 제41조제2항
				차. <u>과태료 부과·징수</u>	· 같은 법 제51조

현행			개정안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p>4.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p> <p>나. 승강기관리주체에 대한 검사</p> <p>다. 과태료 부과·징수</p> <p>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전·파기·수거명령 등</p> <p>나. 과태료의 부과·징수</p>	<p>·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p> <p>· 같은 법 제21조</p> <p>· 같은 법 제28조</p> <p>·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p> <p>· 같은 법 제41조</p>
	〈신설〉		대덕특구과	<p>1. 산업단지내 사유행정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용허가</p> <p>나. 대장 및 증서 보존</p> <p>다. 재산관리</p>	<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p> <p>· 같은 법 제44조제1항</p> <p>· 같은 법 제44조제2항</p>
농업유통과	<p>2 (생략)</p> <p>가. 허가 및 허가증 교부</p> <p>〈신설〉</p>	<p>· 「약사법」 제44조 및 제45조</p> <p>·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p>	농업유통과	<p>2 (현행과 같음)</p> <p>가. 허가 및 허가증 교부</p> <p>5.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권한</p> <p>가. 원산지의 표시등의 조사</p> <p>나. 원산지 표시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처분</p>	<p>· 「약사법」 제45조</p> <p>·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p> <p>·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p> <p>· 같은 법 제18조의2</p> <p>· 같은 법 제38조</p>
산업용지팀	<p>1. 산업단지내 사유행정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용허가</p> <p>나. 대장 및 증서 보존</p> <p>다. 재산관리</p>	<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p> <p>· 같은 법 제44조제1항</p> <p>· 같은 법 제44조제2항</p>		〈삭제〉	
인력개발과	1. (생략)		운영지원과	1. (현행과 같음)	

현			개 정 안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지적과	1. 사유집종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재산의 합필신청 및 분필 및 기타 사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나. 제 대장 및 증서 보존관리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4조·제5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삭제〉	
관 광 문화재과	1. 문화재 수리 2.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제75조 ·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제2항	문화예술과	1. 전통사찰의 경내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제2항
			관 광 문화재과	1. 문화재 수리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제75조
보건위생과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6. 약업사의 영업소 이전허가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933호)부칙 제4조	보건위생과	5. 약업사의 영업소 이전허가 〈삭제〉	· 「약사법 시행규칙」 (제434호)부칙 제6조
수질관리과	1. (생략) 가. (생략) 나. 지도 및 명령 등 다. (생략) 〈신설〉	· 같은 법 제46조	맑은물 정책과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지도와 개선명령 다. (현행과 같음) 5. 측정기기의 부착확인 등(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내 사업장은 제외)	· 같은 법 제47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항
공원산림과	1. (생략)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보문산, 세천, 기양, 둔산대공원, 계족산 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계족산공원중 장동산립욕장 구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나. 도시공원의 조성계획(변경) 입안 및 결정 (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 (1) 근린공원 입안 (2) 소공원, 어린이공원 입안·결정·인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제1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푸른도시과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보문산, 세천, 기양, 둔산대공원, 계족산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계족산공원중 장동산립욕장 구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녹지활용계약 나. 녹지계약 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라. 도시공원의 조성계획(변경) 입안 및 결정(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 (1) 근린공원 입안 (2) 소공원, 어린이공원 입안·결정·인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1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현			개 정 안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p>(3) <u>주제공원(역사·문화·수변·보지·체육공원 등) 입안</u></p> <p>다. <u>공원조성계획의 정비</u></p> <p>라. <u>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u></p> <p>마. <u>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위탁 및 공고</u></p> <p>바. <u>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인가·관리위탁 및 공고</u></p> <p>사. <u>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u></p> <p>아. <u>점용공작물의 관리</u></p> <p>자. <u>도시공원의 점용허가</u></p> <p>차. <u>원상회복</u></p> <p>카. <u>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허가</u></p> <p>타. <u>매수대상토지의 매수 및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u></p> <p>파. <u>도시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u></p> <p>하. <u>녹지의 설치 및 관리</u></p> <p>거. <u>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관리</u></p> <p>너. <u>녹지의 점용허가 등</u></p> <p>더. <u>입장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u></p> <p>러. <u>점용료의 강제징수</u></p> <p>머. <u>「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u></p> <p>버. <u>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존실보상</u></p> <p>서. <u>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대장 작성·보관</u></p> <p>어. <u>과태료 부과·징수</u></p> <p>〈신설〉</p>	<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p> <p>· 같은 법 제9조</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p> <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p> <p>· 같은 법 제21조</p> <p>· 같은 법 제22조</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24조</p> <p>· 같은 법 제25조</p> <p>· 같은 법 제27조</p> <p>· 같은 법 제29조·제30조·제32조</p> <p>· 같은 법 제33조</p> <p>· 같은 법 제36조</p> <p>· 같은 법 제37조</p> <p>· 같은 법 제38조</p> <p>· 같은 법 제40조·제41조</p> <p>· 같은 법 제43조</p> <p>· 같은 법 제45조·제47조</p> <p>· 같은 법 제46조</p> <p>· 같은 법 제41조</p> <p>· 같은 법 제56조</p>		<p>(3) <u>주제공원(역사·문화·수변·보지·체육공원 등) 입안</u></p> <p>마. <u>공원조성계획의 정비</u></p> <p>바. <u>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u></p> <p>사. <u>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위탁 공고</u></p> <p>아. <u>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u></p> <p>자. <u>점용공작물의 관리</u></p> <p>차. <u>도시공원의 점용허가</u></p> <p>카. <u>원상회복</u></p> <p>타. <u>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허가</u></p> <p>파. <u>매수대상토지의 매수 및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u></p> <p>하. <u>도시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u></p> <p>거. <u>녹지의 설치 및 관리</u></p> <p>너. <u>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관리</u></p> <p>더. <u>녹지의 점용허가 등</u></p> <p>러. <u>입장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u></p> <p>머. <u>점용료의 강제 징수</u></p> <p>버. <u>「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u></p> <p>서. <u>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존실보상</u></p> <p>아. <u>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대장 작성·보관</u></p> <p>저. <u>과태료의 부과·징수</u></p> <p>3. <u>광장시설 유지관리(경관광장 등 공원·녹지 기능을 하는 광장에 한한다)</u></p>	<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p> <p>· 같은 법 제19조</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p> <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p> <p>· 같은 법 제22조</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24조</p> <p>· 같은 법 제25조</p> <p>· 같은 법 제27조</p> <p>· 같은 법 제29조·제30조·제32조</p> <p>· 같은 법 제33조</p> <p>· 같은 법 제36조</p> <p>· 같은 법 제37조</p> <p>· 같은 법 제38조</p> <p>· 같은 법 제40조·제41조</p> <p>· 같은 법 제43조</p> <p>· 같은 법 제45조·제47조</p> <p>· 같은 법 제46조</p> <p>· 같은 법 제51조</p> <p>· 같은 법 제56조</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p>

현행			개정안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푸른도시 사업단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보문산 세천 가양 둔산대공 원 계축산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계축산공원중 장동산립 욕장 구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녹지활용계약 나. 녹화계약 2. 광장시설 유지관리 (경관광장 등 공원녹지 기능을 하는 광장에 한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삭제〉	
자원 순환과	1.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신고 및 변경 신고수리 2.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 수 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종합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 및 지정폐기물은 제외함)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나. 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 다.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라. 과징금 부과·징수 마.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수리 바.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에 관한 사항 사. 폐기물처리에 관한 보고· 검사 등 아.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 기물처리 자. 법령 또는 명령의 위반행 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 에 관한 사항 3. 과태료 부과·징수 4. 폐기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 항·제2항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 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19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45 조 · 같은 법 제43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5 · 같은 법 제56조·제5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8 조	자원순환과	1.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 2.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 수 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종합 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 한(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 반업 및 지정폐기물은 제외함)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나. 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 다.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라. 과징금 부과·징수 마.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바.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에 관한 사항 사. 폐기물처리에 관한 보고· 검사 등 아.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 기물 처리 자. 법령 또는 명령의 위반행 위에 대한 행정 처분 및 청문 에 관한 사항 3. 과태료 부과·징수 4. 폐기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0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제2항 · 같은 법 제60조·제61조 · 같은 법 제6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현			개 정 안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p>5.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등</p> <p>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승인</p> <p>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p> <p>라. 과징금의 처분 등</p> <p>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p> <p>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p> <p>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개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p> <p>아.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p> <p>자. 관리·의무의 승계 등</p> <p>차. 휴업·폐업 등의 신고 및 보고, 검사 등</p> <p>카.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p> <p>타. 방치폐기물의 처리</p> <p>파.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및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p> <p>하. 청문</p>	<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제25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2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p> <p>· 같은 법 제27조</p> <p>· 같은 법 제28조</p> <p>· 같은 법 제29조</p> <p>· 같은 법 제30조제3항</p> <p>· 같은 법 제31조</p> <p>· 같은 법 제33조·제34조</p> <p>·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p> <p>· 같은 법 제43조</p> <p>· 같은 법 제45조·제46조</p> <p>· 같은 법 제57조</p>		<p>5.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등</p> <p>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승인</p> <p>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p> <p>라. 과징금의 처분 등</p> <p>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p> <p>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p> <p>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개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p> <p>아.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p> <p>자. 관리·의무의 승계 등</p> <p>차. 휴업·폐업 등의 신고 및 보고, 검사 등</p> <p>카.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p> <p>타. 방치폐기물의 처리</p> <p>파.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및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p> <p>하. 청문</p>	<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제25조</p> <p>·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p> <p>· 같은 법 제23조제3항</p> <p>· 같은 법 제26조</p> <p>· 같은 법 제27조</p> <p>· 같은 법 제28조</p> <p>· 같은 법 제29조</p> <p>· 같은 법 제30조제3항</p> <p>· 같은 법 제31조</p> <p>· 같은 법 제33조·제34조</p> <p>· 같은 법 제41조</p> <p>· 같은 법 제43조</p> <p>· 같은 법 제45조·제46조</p> <p>· 같은 법 제57조</p>
생태하천 사업단	<p>1. 지방·2급 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관리·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p> <p>나. 하천대장의 작성·보관</p> <p>다.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p> <p>라. 하천유수의 사용·관리</p>	<p>· 「하천법」 제4조제2항</p> <p>· 같은 법 제44조</p> <p>· 같은 법 제45조</p> <p>· 같은 법 제21조</p>	생태하천 사업단	<p>1.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관리·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p> <p>나.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보관</p> <p>다.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p> <p>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p>	<p>· 「하천법」 제5조제2항</p> <p>· 같은 법 제15조</p> <p>· 같은 법 제27조</p> <p>· 같은 법 제30조</p>

현행			개정안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u>마.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u> <u>바. 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다만 관리청 지원공사는 사전시행계획 협의 및 준공승인)</u> <u>사.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u> <u>아.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u> <u>자. 하천의 점용허가 등</u> <u>차. 점용공사의 대행</u> <u>카. 점용료 등의 징수</u> <u>타. 점용료등의 감면</u> <u>파.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u> <u>하.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u> <u>거. 과오납금의 반환</u> <u>너.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u> <u>더. 공익을 위한 처분 등</u> <u>러. 하천 감시원 임명 등</u> <u>머.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 및 출입 등</u> <u>버.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u> <u>서. 낚시등의 금지구역 지정등</u> <u>어. 하천의 사용금지 등</u> <u>저. 원상회복 의무면제 등</u> <u>처.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u>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58조 · 같은 법 제59조 · 같은 법 제64조 · 같은 법 제65조 · 같은 법 제68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같은 법 제72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74조		<u>마. 하천의 점용허가 등</u> <u>바. 하천점용공사의 대행</u> <u>사.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u> <u>아.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u> <u>자. 하천의 사용금지 등</u> <u>차. 원상회복 의무</u> <u>카. 낚시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u> <u>타. 부담금등의 강제 징수</u> <u>파. 잘못 납부된 부담금등의 반환</u> <u>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u> <u>거. 공익을 위한 처분 등</u> <u>너. 하천관리원 임명 등</u> <u>더. 점용물 등의 제거·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u> <u>러. 하천관리상황의 점검</u> <u>머.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u> <u>버.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u>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47조 · 같은 법 제4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같은 법 제67조 · 같은 법 제68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2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6조

현행			개정안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u>키.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u> <u>터.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u> <u>피. 허가수수료 징수·감면</u> <u>허. 청문</u> <u>고. 과태료 부과·징수</u>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88조		<u>서.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u> <u>어. 토지 등의 수용·사용</u> <u>저. 하천표지의 설치·관리</u> <u>처. 폐천부지등의 관리</u> <u>커.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u> <u>티. 허가수수료 징수·감면</u> <u>피.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 및 출입등</u> <u>허. 청문</u> <u>고. 과태료 부과·징수</u>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78조 · 같은 법 제83조 · 같은 법 제84조 · 같은 법 제85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제90조 · 같은 법 제91조 · 같은 법 제98조
	2.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 (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촉탁, 관리 청명칭 첨기 등)	· 같은 법 제3조		2. 국가하천의 관리에 관한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 「하천법」 제37조
	3. 국가하천 및 지방급 하천에 관 한 다음의 권한			3. 국가하천 및 지방급 하천에 관 한 다음의 권한	
	가. 보상대상지의 결정	·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 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령」 제5조		가. 보상대상지의 결정	·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 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령」 제5조
	나. 보상계획의 수립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나. 보상계획의 수립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라. 보상금액의 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라. 보상금액의 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마. 보상금 지급의 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마. 보상금 지급의 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바.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바.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4. 집중재산(폐천부지)의 관리 및 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28조			

현			개 정 안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운송주차 관 리 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운송주차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신청기간의 연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		가.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신청기간의 연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38조제1항 내지 제3 항
	나. 공사완료 시설 확인	· 같은 법 제39조제4항		나. 공사완료 시설 확인	· 같은 법 제38조제4항
	다. 사용개시일 연장	· 같은 법 제40조		다. 사용개시일 연장	· 같은 법 제39조
	라. 사용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 같은 법 제41조		라. 사용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 같은 법 제40조
	마. 시설사용료의 인가 및 변경인 가	· 같은 법 제42조		마. 시설사용료의 인가 및 변경인 가	· 같은 법 제41조
	바.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 및 지정명령	·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 항		바.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 및 지정명령	·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 3항
	사.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 같은 법 제43조제3항		사.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 같은 법 제42조제3항
	아. 위치·규모·구조·설비의 변 경인가	· 같은 법 제45조		아. 위치·규모·구조·설비의 변 경인가	· 같은 법 제43조
	자. 개선명령	· 같은 법 제46조		자. 개선명령	· 같은 법 제44조
	차. 사용명령	· 같은 법 제47조		차. 사용명령	· 같은 법 제45조
	카. 사업의 상속 및 양도 양수 법인합병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50조		카. 사업의 상속 및 양도 양수 법인합병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48조
	타. 사업의 휴지·폐지허가	· 같은 법 제50조		타. 사업의 휴지·폐지허가	· 같은 법 제48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 고·검사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7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 항제6호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 고·검사 등	· 같은 법 제79조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및 유상임대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 조·제52조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및 유상임대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56조
	4~6. (생략)			4~6. (현행과 같음)	
	〈신설〉			7.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수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현행			개정안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건설도로과	<p>1. 도시계획상 폭 20m 미만의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의 접수</p> <p>나.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p> <p>다.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p> <p>라. 도로구역의 결정, 변경 및 고시</p> <p>마.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p> <p>바. 타공작물 관리지에 대한 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p> <p>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p> <p>아.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p> <p>자. 부대공사의 시행</p> <p>차. 공공단체등에 대한 도로 수선 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p> <p>카.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 허가</p> <p>타. 도로대장의 작성보관·관리</p> <p>파. 도로점용허가</p> <p>하. 점용공사의 대행</p> <p>거. 점용료 부과·징수</p> <p>너. 원상회복의 확인</p> <p>더. 비상재해시 필요 토지·가옥·공작물의 일시사용 및 토석·죽목 기타 물건의 사용 또는 수용</p> <p>러.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사용 또는 수용 등</p> <p>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p>	<p>· 「도로법」 제6조</p> <p>· 같은 법 제23조의2</p> <p>· 같은 법 제24조</p> <p>· 같은 법 제25조</p> <p>· 같은 법 제28조</p> <p>· 같은 법 제29조</p> <p>· 같은 법 제30조</p> <p>· 같은 법 제31조</p> <p>· 같은 법 제32조</p> <p>· 같은 법 제33조</p> <p>· 같은 법 제34조</p> <p>· 같은 법 제38조</p> <p>· 같은 법 제40조</p> <p>· 같은 법 제42조</p> <p>· 같은 법 제43조</p> <p>· 같은 법 제45조</p> <p>· 같은 법 제49조</p> <p>· 같은 법 제49조의2</p> <p>· 같은 법 제52조</p>	건설도로과	<p>1. 도시계획상 폭 20m 미만의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의 접수</p> <p>나.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p> <p>다.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p> <p>라. 도로구역의 결정, 변경 및 고시</p> <p>마.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p> <p>바. 타공작물 관리지에 대한 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p> <p>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p> <p>아.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p> <p>자. 부대공사의 시행</p> <p>차. 공공단체등에 대한 도로 수선 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p> <p>카.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허가</p> <p>타. 도로대장의 작성보관·관리</p> <p>파. 도로점용허가</p> <p>하. 점용공사의 대행</p> <p>거. 점용료 부과·징수</p> <p>너. 원상회복의 확인</p> <p>더. 비상재해시 필요 토지·가옥·공작물의 일시사용 및 토석·죽목 기타 물건의 사용 또는 수용</p> <p>러.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p> <p>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p>	<p>· 「도로법」 제4조</p> <p>· 같은 법 제22조</p> <p>· 같은 법 제23조</p> <p>· 같은 법 제24조</p> <p>· 같은 법 제27조</p> <p>· 같은 법 제29조</p> <p>· 같은 법 제30조</p> <p>· 같은 법 제31조</p> <p>· 같은 법 제32조</p> <p>· 같은 법 제33조</p> <p>· 같은 법 제34조</p> <p>· 같은 법 제36조</p> <p>· 같은 법 제38조</p> <p>· 같은 법 제40조</p> <p>· 같은 법 제41조</p> <p>· 같은 법 제43조</p> <p>· 같은 법 제47조</p> <p>· 같은 법 제48조</p> <p>· 같은 법 제57조</p>

현행			개정안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u>비. 도로의 통행금지 및 제한 명령</u> <u>서. 차량의 운행제한(단속)</u> <u>아.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u> <u>저.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u> <u>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u> <u>커. 부대공사비용의 부과·징수</u> <u>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부담하는 수선·유지비용의 부과·징수</u> <u>퍼.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조치명령</u> <u>허. 점용허가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u> <u>고. 청문실시</u> <u>노. 도로에 관한 사항 조사 등</u> <u>도. 수수료의 징수</u> <u>로. 부담금등의 강제징수</u> <u>모. 과오납금의 반환</u> <u>보.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u> <u>소. 변상금의 부과·징수</u> <u>오. 과태료의 부과·징수</u> <u>2. 도시계획상 폭 20m 이상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u> <u>가. 보도의 개축, 수선 등 유지관리 및 굴착 허가(자전거도로 포함)</u> <u>나. 도로점용허가(다만,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제외)</u>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4조 · 같은 법 제62조 ·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제64조 · 같은 법 제65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5조의2 · 같은 법 제76조의2 · 같은 법 제77조의2 · 같은 법 제78조 · 같은 법 제78조의2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제80조의2 · 같은 법 제86조의2 · 같은 법 제3조·제23조 · 같은 법 제40조		<u>비. 도로의 통행금지 및 제한 명령</u> <u>서. 차량의 운행제한(단속)</u> <u>아.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u> <u>저.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u> <u>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u> <u>커. 부대공사비용의 부과·징수</u> <u>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부담하는 수선·유지비용의 부과·징수</u> <u>퍼.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조치명령</u> <u>허. 공익을 위한 처분</u> <u>고. 청문실시</u> <u>노. 도로에 관한 사항 조사 등</u> <u>도. 수수료의 징수</u> <u>로.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u> <u>모. 과오납금의 반환</u> <u>보.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u> <u>소. 변상금의 부과·징수</u> <u>오. 과태료의 부과·징수</u> <u>2. 도시계획상 폭 20m 이상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u> <u>가. 보도의 개축, 수선 등 유지관리 및 굴착 허가(자전거도로 포함)</u> <u>나. 도로점용허가(다만,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제외)</u>	· 같은 법 제58조 · 같은 법 제59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78조 · 같은 법 제83조 · 같은 법 제84조 · 같은 법 제85조 · 같은 법 제87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제90조 · 같은 법 제91조 · 같은 법 제93조 · 같은 법 제94조 · 같은 법 제101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8조

현행			개정안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다. 점용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3조		다. 점용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1조
	라. 차량의 운행제한(단속)	·같은 법 제54조		라. 차량의 운행제한(단속)	·같은 법 제59조
	마. 적치물의 제거, 보관 관리 등	·같은 법 제54조의7		마. 적치물의 제거, 보관 관리 등	·같은 법 제65조
	바. 변상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80조의2		바. 변상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3. 폭 20m 미만 교량·차도육교 포함 및 터널에 대한 다음 사항(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2종 시설물은 제외)			3. 폭 20m 미만 교량·차도육교 포함 및 터널에 대한 다음 사항(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2종 시설물은 제외)	
	가. 신설 개축,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조·제23조		가. 신설 개축,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3조
	나. 안전점검실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9조		나. 안전점검실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7조
	다.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같은 법 제3조·제23조		다.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같은 법 제23조
	4. 도로의 부속물중 다음의 권한			4. 도로의 부속물중 다음의 권한	
	가. 가로등의 신설 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조·제23조		가. 가로등의 신설 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3조
	나. 지하차도 배수·조명·전기·지하재방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타일세척포함)	·같은 법 제3조·제23조		나. 지하차도 배수·조명·전기·지하재방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타일세척포함)	·같은 법 제23조
	다. 지하보도 개축, 수선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조·제23조		다. 지하보도 개축, 수선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3조
	라. 가도교의 배수·조명·전기·안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조·제23조		라. 가도교의 배수·조명·전기·안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3조
	마. 터널의 배수·조명·전기·지하재방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조·제23조		마. 터널의 배수·조명·전기·지하재방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3조
	바. 지하상가 출입구 및 지하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제외)	·같은 법 제3조·제23조		바. 지하상가 출입구 및 지하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제외)	·같은 법 제23조
	사. 보도육교 개축, 수선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조·제23조		사. 보도육교 개축, 수선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3조
	5. 폭 20m 미만 도로의 도로편입용 지보상(매수 및 소유권이전)	·같은 법 제49조의2 및 제7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5. 폭 20m 미만 도로의 도로편입용 지보상(매수 및 소유권이전)	·같은 법 제48조 및 제92조
	6. 기부재산(지하상가) 무상사용 허가	·「도로법」 제40조		6. 기부재산(지하상가) 무상사용 허가	·「도로법」 제38조
	7.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지목상 도로인 경우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7. 공유재산의 대장 및 실태조사(도로인 경우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현행			개정안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도시관리과	5. (생략)		주택정책과	5. (현행과 같음)	
	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포함,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 「도시개발법」 제3조· 제 77조		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포함,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 「도시개발법」 제3조· 제79조
	나.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받아야 함)	· 같은 법 제4조· 제77조		나.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받아야 함)	· 같은 법 제4조· 제79조
	자.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승인	· 같은 법 제22조		자.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승인	· 같은 법 제23조
	차.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 지등의 대금(선수금) 사전 징수 승인	· 같은 법 제24조		차.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 지등의 대금(선수금) 사전 징수 승 인	· 같은 법 제25조
	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 같은 법 제25조		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 같은 법 제26조
	타.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보 완시공 명령	· 같은 법 제49조· 제50조		타.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보 완시공 명령	· 같은 법 제50조· 제51조
	파.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 가	· 같은 법 제52조		파.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 가	· 같은 법 제53조
	하. 구청장이 시행자인 경우 지방 자치단체간 비용부담 협의	· 같은 법 제55조		하. 구청장이 시행자인 경우 지방 자치단체간 비용부담 협의	· 같은 법 제56조
	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권한	· 같은 법 제57조		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권한	· 같은 법 제58조
	너.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등	· 같은 법 제65조		너.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등	· 같은 법 제66조
	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같은 법 제67조		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같은 법 제68조

현행			개정안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도시관리과	〈신설〉		주택정책과	8.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국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가하는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나. 500세대 미만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 지정(전기감리 포함), 감리업무 지정 제한 다. 5만㎡ 미만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 「주택법」 제1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 「주택법」 제24조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 「주택법」 제16조
	〈신설〉			9.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착공신고의 접수·승인취소	· 같은 법 제16조
	〈신설〉			10. 감리자교체 및 보고업무	· 같은 법 제24조
	〈신설〉			11. 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90조
	〈신설〉			12.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같은 법 제93조
건축과	1.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국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가하는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나. 500세대 미만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 지정(전기감리 포함), 감리업무 지정 제한 다. 5만㎡ 미만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 「주택법」 제1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 「주택법」 제24조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 「주택법」 제16조		〈삭제〉	
	2.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착공신고의 접수·승인취소	· 같은 법 제16조			
	3. 감리자교체 및 보고업무	· 같은 법 제24조			
	4. 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90조			
	5.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같은 법 제93조			

현행			개정안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p>6. 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p> <p>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p> <p>나. 2이상의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p>	<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제1호</p> <p>· 같은 법 제3조의2제2호</p>			
	〈신설〉		도시 디자인과	<p>1. 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p> <p>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p> <p>나. 2이상의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p>	<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제1호</p> <p>· 같은 법 제3조의2제2호</p>
	〈신설〉		지적과	<p>1. 사유집중재산(폐천부지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p> <p>나. 대장과 증서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p>	<p>·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p> <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항</p>

관 계 법 령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 관리법 】

제13조 (말소등록) ①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2.8.26, 2008.3.28>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
6.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

제17조 (권한의 위임) ②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7.29>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한다)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12. 삭제 <1999.7.29>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15. 삭제 <1999.7.29>
16. 삭제 <1999.7.29>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19. 삭제 <1999.7.29>
20. 삭제 <1999.7.29>
21. 삭제 <1999.7.29>
22. 삭제 <1999.7.29>
23. 삭제 <1999.7.29>
24.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법 제7조·법 제9조·법 제13조제7항·법 제18조·법 제20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25. 삭제 <1999.7.29>
26. 삭제 <1999.7.29>
27. 삭제 <1999.7.29>
28. 삭제 <1999.7.29>
29. 삭제 <1999.7.29>
30. 삭제 <1999.7.29>
31. 삭제 <1999.7.29>
32. 삭제 <1999.7.29>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제1항·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도로법 】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제16조에 따라 노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 간에 협의하여 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밖의 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협의나 재정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로의 관리청은 10년 단위로 그 소관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3. 환경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
4.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로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도로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 도로의 관리청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①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 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한다. 다만,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도로구역 결정) ①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면 설계도서, 자금 계획, 사업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도로의 사용과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을 지정 또는 인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으면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키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① 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타공작물이 있으면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는 이를 도로의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제31조(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부대 공사의 시행) ①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제33조(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사인)에게 경미한 도로 수선 공사나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연결되거나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구간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 유지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도로대장) ① 관리청은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 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도로의 구조·시설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보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면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점용공사의 대행) ①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리청은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원상회복) ①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을 폐지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제47조(비상 재해 시 토지 등의 사용) 관리청은 재해로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도로 부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죽목·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제48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7조(도로표지) ①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에 도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서식,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통행의 금지나 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 구간, 기간,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려면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4조(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①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통로,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

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전용도로나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5조(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① 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시행하는 공사비용) ① 제29조에 따라 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시행하도록 한 도로공사와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해당 도로공사 또는 도로를 유지하는 일로 이익을 얻을 때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그가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5조(타공작물의 공사비용) 제30조에 따라 관리청이 시행하는 타공작물의 공사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수익의 한도에서 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76조(원인자 부담금)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7조(부대 공사의 비용) ①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제38조에 따른 허가(제5조에

다른 협의 또는 승인에 따라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타공사의 비용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제78조(공공단체나 사인이 하는 수선·유지의 비용) ① 공공단체나 사인(사인)이 제33조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나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5조·제34조·제38조·제43조·제45조·제49조제3항·제52조·제58조·제59조·제62조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4조·제38조·제59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83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85조(청문) 관리청이 제34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허가를 제83조나 제84조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7조(도로에 관한 조사 등) 국토해양부장관과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 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

하도록 하거나 교통량 등 교통정보를 도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89조(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제90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도로 관리청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로 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1조(과오납금의 반환) 도로 관리청은 과오납(과오납)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2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고에서 보상하고, 그 밖의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그 밖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93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84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② 제86조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이나 명령으로 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기 때문에 생긴 손실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손실이 제84조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이라면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94조(변상금의 징수)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4.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관리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4조 (허가의 기준)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는 것
 - 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휴지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그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승계)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도한 경우와 법인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인수)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환가)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이나 제2항의 지위의 승계자(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나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위해)를 끼친 경우
4. 제3조,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6.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
7.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한 경우
9.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1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요자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4.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5.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7.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19.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경우
20.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21. 제26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22. 제34조를 위반하여 조정명령을 거부한 경우
23.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경우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과징금) ①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들이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 (안전관리규정)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들은 그 시설 및 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들은 경영 방침, 조직 관리, 자료·정보 관리, 시설 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경영 활동 전반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가스용품의 제조 공정(공정)과 자체검사 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허가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들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⑥허가관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 (안전관리자)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 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 (보고와 조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

석유가스의 수급·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42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판매시설·저장시설, 가스용품 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청문) 허가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5.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6.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7.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0. 제36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11.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

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시가스 시설로 바꾼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시공자
5. 제14조제3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6. 제2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8.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9.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0. 제2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1.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2.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③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0조 삭제 <2006.12.30>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9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수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

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파기 또는 수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이나 파기 또는 수거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언론매체 등을 통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위해성 공표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교환, 환불 또는 수리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보고와 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제6조제3항 각 호의 자 및 제13조제3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공장·사업장·가게 또는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기용품의 제조설비·검사설비, 전기용품, 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비치한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9018호, 2008.3.28>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파법) <제9128호, 2008.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2 삭제 <2008.1.17>

제21조 (보고 및 검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인력·장비·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등 : 생산량, 수입량, 설치대수 및 보수용 부품 확보 현황
2. 보수업자 : 기술인력, 보수대수, 보수계약 체결 승강기 관리주체 현황
3. 관리주체 : 자체점검, 운행관리자, 사고 현황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사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3]

【 약사법 】

제45조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약사법 시행규칙 】

부칙 <제434호,2008.1.15>

제6조 (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법률 제2279호 약사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약업사(종전의 약종상을 말한다)는 그 영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이하 “약방”이라 한다)를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병·의원, 약국 등의 수급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8.2.29, 2008.6.13>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여부·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전자변형표시대상 농산물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8.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8.6.13>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축산물·쌀·김치류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6.12.28, 2008.6.13>

제18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8.4]

제3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08.6.13>

1.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나. 제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다. 제7조의5제4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제13조제2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

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 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5.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2008.6.13>

1. 제1항제1호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중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자

4. 제1항제4호 중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방법·시기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라 한다)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전. 다만, 폐수방류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공고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공고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다만,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등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측정기기에서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고의 조작, 고장, 천동·전자파 등의 돌발현상, 전산망의 이상(이상)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자료(이하 "대체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자료

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라. 제10조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3.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4.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

5.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절차와 확인방법, 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 비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의 종류·선정방법·처리방법,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폐기물 재활용 신고) ①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07.8.3>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 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자
3.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자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6.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7. 제5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8.3>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이를 내보이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营业을 한 경우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4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전문개정 2007.8.3]

제28조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을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을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을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해당 영업을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을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을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각각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 (보고·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휴업이나 영업정지 처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제6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13조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3.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같은 항 제3호의 자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4.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8.3>
9. 제3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삭제 <2007.8.3>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이나 최종처리업만 해당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1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8.4>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2), 나)(1)·(2), 다)(2)·(3), 라)(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처리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허용보관량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8.4>

⑥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0조 (허가증의 재발급)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면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08.8.4>

1.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수집·운반업 :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2. 제9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3. 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 :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4.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 1일 처리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3 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②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천법 】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및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⑥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⑨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하천관리청은 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⑩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2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제30조제4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

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6조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 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하천공사로 본다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사유)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38조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①제11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예정지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재식

②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보다 높게 성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8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에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2.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 (하천관리원) ①시·도지사는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73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하천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하천관리청, 건설교통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 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하는 하천관리청
2.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3.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한한다)
4.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는 건설교통부장관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3. 제31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제83조 (하천표지) ①하천관리청은 하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하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 (폐천부지등의 관리)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8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①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②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89조 (허가수수료) ①제30조·제33조·제3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90조 (보고 및 출입 등) ①하천관리청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설계도서, 그 밖의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7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91조 (청문) 하천관리청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8조 (과태료) ①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허위의 기록을 제출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하 이 조에서 "부과·징수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징수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부과·징수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제38조 (공사시행 인가 등)**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

른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도지사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사용 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 (사용약관) ① 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시설 사용료) ① 터미널사업자는 그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에게서 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인가기준 등 시설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②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시정(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43조 (위치·규모와 구조·설비의 변경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변경
2. 사용약관·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의 변경
3.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질서 유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4. 교육 등 종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조치

5. 휴일이 이어지는 등 수송 수요가 수송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에 필요한 조치
6. 터미널사업자가 경영부실 등으로 승차권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 판매에 필요한 조치

제45조 (사용명령) ① 시·도지사는 터미널이 있는 주변 지역에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는 데에 그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공중(공중)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운송망) 정비를 위하여 그 운송사업자에게 그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터미널 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준용규정)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79조 (보고·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영 제3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00.8.23>

1.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

②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8.23>

③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를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8.23, 2001.6.30>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1.6.30>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다. 택시운전자격증

라. 삭제 <2007.10.15>

마. 반명함판 사진

④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제4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이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없이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리운전자의 자동차운전자동차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운전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5조(관리)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년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8년 10월 28일
3. 상 정 일 자 :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08. 11. 28)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양승찬)

1. 제안이유

조직개편 및 위임사무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및 소관부서를 정비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및 위임사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관부서와 인용법령 등을 정비함(안 별표 1·2·3).

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안 별표 3).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박춘용)

○ 본 개정 조례 안은

관계법 개정에 따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의 관련 사무와
방류수 수질 측정기기 부착 확인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관계법령에서 관련업무의 삭제 또는 사무의 권한이 변동된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및 공고 등 4건의 사무의
위임조항을 삭제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과, 사무의 소관부서 변경 및 관련
사무의 근거법령 해당조문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조례 24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장
등의 명칭을 조정 하려는 것으로서

○ 본 개정 조례 안 검토결과

신규 위임사무의 경우 자치구와 사전에 합의가 되었으며, 조직개편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신설, 삭제, 변경 등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